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이해



알쏭달쏭?? 퀴즈

- 달리기 경주에서 뛰고 있습니다. 2등인 선수를 앞질렀습니다. 그럼 지금 당신은 몇 등?
- (머리로만 풀기) 1000에다 40을 더합니다. 그리고 또 1000을 더합니다. 그리고 30을 더하고 다시 또 1000을 더합니다. 그리고 20을 더하고 또 1000을 더합니다. 이제 10을 더합니다. 그럼 총합은?
- 영희의 아버지는 5명의 딸이 있습니다. 일순, 이순, 삼순, 사순이, 그럼 마지막 딸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공익신고

공익신고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 이를 **신고, 진정, 제보, 고소, 고발**하거나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행위

공익신고 접수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국회의원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 단체, 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 공단 등 공동단체

공익신고

공익신고 접수와 처리 절차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기관, 수사기관 중 하나의 기관에 신고를 송부하고 신고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보함. 신고사항은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에서 조사,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며,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자에게 조사결과를 통보

공익신고 방법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된 때는 언제든지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는 **전화, 방문, 우편, 팩스,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공익신고의 필요성

국민생활의 안정

- 공익침해행위 적발 및 예방
-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 국민생활의 질 향상
- 보호범위의 확대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풍토 조성

- 민간의 자율적인 공익침해 예방
-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



- 기업 윤리경영 정착
- 건전한 내부공익신고문화 정착



iMac

공익신고자 보호의 필요성

"공익제보 의인들, 너무 희생 크다"

PRESSStar | 기사입력 2005-02-01 12:21 | 최종수정 2005-02-01 12:21

[프레시안 강양구/기자] 불이익을 감수하며
이러한 일이 최소 2~3천만원에서 많게는 억단

"공익제보 뒤 생계마저 위협받아" <아름다운재단>
...비리를 고발한
...가 어려

[사설] 고발자가 왕따 당하는 폐쇄사회

서울신문 | 기사입력 2005-05-27 11:39 | 최종수정 2005-05-27 11:39

[서울신문] 직장내 비리를 제보한 내부고발자들이 조직에서 따돌림이나 불이익을 당하는 등 고통이 심각한 것으로 한 연구조사에서 드러났다. 공익보호를 위해 도입된 내부고발제도가 고발자를 보호하지 못한다면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내부고발은 조직의 비리와 부패를 바로잡자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래서 내부고발자는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아야 한다. 그런데도 내부제보자들이 징계나 해고, 직장내 따돌림과 협박에 시달린다면 우리 사회가 아직도 폐쇄사회에 머물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고발과 고자질은 구분되어야 한다. 고발은 음해나 비방과는 분명히 다른 것이다. 조직내의 비리나 부패는 내부자가 가장 잘 알 것이고, 그것을 외부에 알리고 시정하는 것은 공익에 부합하는 것이다. 지난 2002년 부패방지법이 발효된 이후 한 지방 공무원이 부정한 예산집행을 내부고발해 10억여원을 국고에 환수조치되도록 하기도 했다. 이런 공무원이 협박을 받거나 왕따를 당한다면 부정과 부패에 집단으로 눈을 감자는 것과 다름없다.

미국은 1989년 정부기관의 부패에 대해 '내부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만들었고, 영국도 1999년 '공익제보 보호법'을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02년 부패방지법에 내부고발제를 도입했지만 벌써 부작용이 나온다면 그 목적이 무색해질 수밖에 없다. 또 국가기관이 그렇다면 민간기업은 말할 것도 없을 것이다. 마침 국회에서 민간기업의 내부고발자에 대해서도 불이익을 방지하는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민간인인든 공직자든간에 부패방지에 일조한다면 사회가 보호해야 한다. 아

2005-02-01 16:36

...로서 가족에 미안"

... 자녀를 둔 가정으로서 얼얼울 수

... 이후 겪고 있는 피해 상황을 조사한
...레스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것으로 조

대학강사 김모씨는 14년간 해오던 강
도 제대로 못하게 되면서 3천여만원
실정.

... "훌륭한 공익제보자가 되는 것
...워지지 않기를 바란다"는 뜻을 전

...를 제보한 전직 회사원 김모씨
...제 퇴직당했다.

공익신고자 보호의 필요성

2002년

부패방지법에 공공부문에서 발생하는 부패행위 신고 및 신고자 보호에 대해 규정하여 신고자 보호를 위한 초석마련

2007년

권익위법(구 부패방지법)에 행동강령위반 신고자도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규정을 준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신고자 보호범위를 넓힘

2011년

국민의 건강·안전이나 환경 등 민간분야에서 주로 발생하는 공익침해행위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해 공익신고자보호법이 제정되어 공익신고 및 보호범위를 민간까지 확대해 나가고 있음

해외 공익신고자 보호법

국가	관련 법 (제정년도)	취지
미국	Whistle-blowing Protection Act(1989)	공공부문의 공익신고자 보호
	Sarbanes-Oxley Corporate Reform Act(2002)	공익신고자보호를 민간영역까지 확대하여 기업, 은행 등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 규제 및 공익신고자 보호
영국	Public Interest Disclosure Act(c23)(1998)	민간 · 공공영역에 걸쳐 공익신고자 보호
캐나다	Protected Disclosure Act(2000)	기업의 부정행위를 규제하고 이를 신고한 공익신고자를 보호
	Public Service Whistle-blowing Act(2001)	공직자의 부정행위 신고
호주	Public Service Bill(1999)	공익신고자 보호
뉴질랜드	Superannuation Schemes Act(1989)	연금운영제도의 부정행위 규제
	Protected Disclosures Act(2000)	공익신고자 보호
	Anti-Money Laundering and Countering Financing of Terrorism Act(2009)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일본	공익통보자보호법(2004)	공익신고를 한 노동자를 보호하는 법률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구성

비밀
보장

공익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분공개 · 보도 등의 금지

신변
보호

생명 · 신체의 중대한 위해 방지

보호
조치

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원상회복, 책임 감면 등

비밀보장



누구든지 공익신고자의 동의 없이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는 것을 금지



공익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동거인이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조사·형사 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이 준용



공익신고 기관의 종사자 등은 조사결과 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 인적사항 등을 포함함 신고내용을 공개할 수 없음

⇒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신변보호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동거인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국민권익위원회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변보호조치 요청

신변보호의 종류	일정 기간 특정시설에서 보호	경찰청장 관할 지방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
	일정 기간 신변 경호	
	출석·귀가 시 동행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	
	기타 신변안전에 필요한 조치	

보호조치(불이익조치의 금지 등)

불이익조치의 종류 (법 제23조제6호)



- 파면, 해임, 해고 등 신분상실
-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등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 성과평가동료평가의 차별 및 그에 따른 임금·상여금 차별지급
- 교육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 취소, 예산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제거, 보안정보·비밀정보 사용 정지 및 취업자격의 취소 등 근무조건상 차별
- 주의대상자명단 작성·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
-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조사 및 그 결과의 공개
- 인·허가 취소 등 행정적 불이익
- 물품·용역계약의 해지 등 경제적 불이익

⇒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누구든지 공익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할 수 없음

⇒ 위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보호조치(원상회복 등의 보호 조치)



불이익조치를 받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



불이익조치를 받은 경우
보호조치 신청



불이익조치
금지 권고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호조치 요구



- 불이익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원상회복
- 차별 지급되거나 체불된 보수 등(이자 포함)의 지급
- 그 밖에 불이익조치에 대한 취소 또는 금지

보호조치

책임 감면 등

- 형의 감경 및 면제
- 징계의 감면
-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 배제
- 손해배상 청구 금지

인사조치의 우선적고려

- 공익신고자등이 전직 · 전출 · 전입 · 파견근무 등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우선적으로 고려

공익신고자 보상 및 구조

보상금 지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수입회복증대시 대상 가액의 4~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최고10억원까지 지급

구조금 지급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치료 비용, 이사 비용, 소송비용 등을 지출한 경우 및 임금 손실액등에 대해 지급

※ 타 기관 보상금·구조금과의 중복 지급 금지

보상금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증대를 가져오는 부과 (법 제26조)



- 벌칙·통고처분
- 몰수·추징금 부과
- 과태료·이행강제금 부과
- 과징금(인·허가 취소·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포함) 부과
- 국세·지방세 부과
- 부담금·가산금 부과
- 손해배상·부당이득 반환 등의 판결

공익신고자의 신청 ⇒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 지급

구조금

구조금 신청 사유 (법 제27조)



1. 육체적·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
2. 전직·파견근무 등으로 소요된 이사비용
3. 원상회복 관련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
4.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 다만 36개월을 초과하지 못함
5. 그 밖에 중대한 경제적 손해, 다만 법 제2조제6호 아목의 '안·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와 자목의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는 제외

공익신고자의 신청 ⇒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 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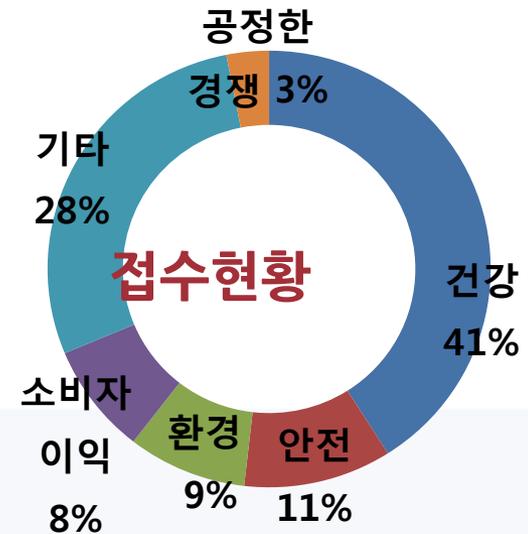
공익신고자보호 운영성과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이익, 공정경쟁 등에 대한 국민적 감시체계 확립

연도별 접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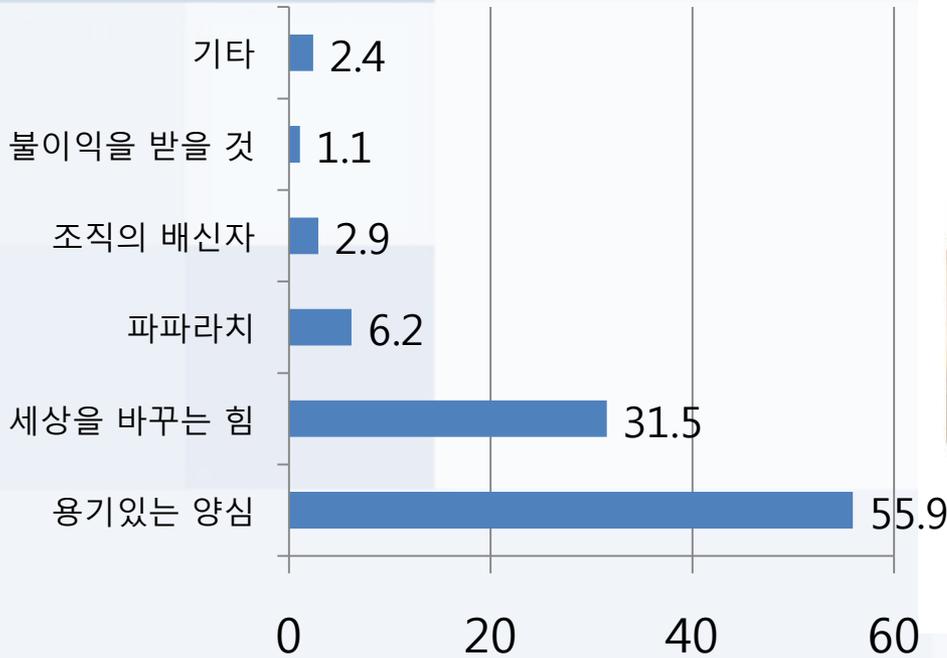


공익신고 접수현황



공익신고자보호 운영성과

공익신고자에 대한 인식



‘공익침해 알게 되면 신고하겠다’ 92%



권익위,
공익신고제도 관련 국민신문고 온라인 설문결과 발표



부패·공익신고상담
친절하고 정성껏 상담해 드립니다.

국번없이

1398 국민콜 **110**

국민권익위원회의 협조사항

공익신고자 보호기반 마련

- 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를 위한 내부시스템 정비
- 세부추진시책 수립 및 시행

공익신고 사건처리 협조

- 공익신고 접수 통계, 신고 관련 자료 등 제출 협조
- 직접신고 사건 및 이첩사건에 대한 신고자 보호

직장교육 및 제도 전파

- 신고자 보호에 관한 직장교육 실시
-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홍보 및 자료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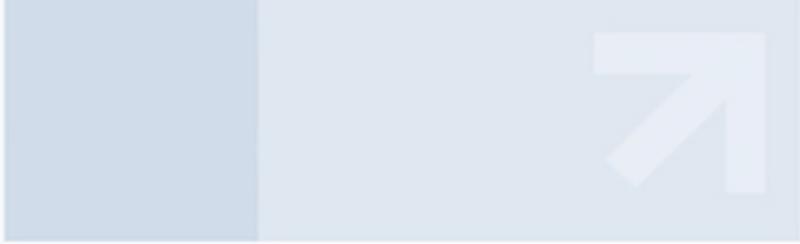
제도운영 협의체 참여

-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를 위한 협의체 참여
- 인센티브 마련, 제도개선, 사례발굴, 캠페인 등 공동협력

마무리하며...




$$C = B \sim D$$



**Life is Choice
between
Birth and Death**

청렴 韓 세상

감사합니다

